

‘유령 비트코인’ 구조적 허점…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절실

‘빗썸 오지급’ 정치권 파장

與 “‘미보유 자산 장부상 거래 활용
과정서 가격변동·투자자 혼란 발생
원인·책임 소재 명확히 밝혀야”

野 “단순 해프닝 아닌 구조적 결함
뱅크런·시장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 규명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진행해오던 랜덱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2000개(약 1970억원)를 294명에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랜덱스 이벤트는 참여자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64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무한 것 아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뉴시스

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당측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실제 판매하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에 불과한데도,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유령 비트코인’ 의혹도 일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이른바 ‘유

령 비트코인’ 사태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장부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장부상 거래에 활용되고, 그 과정에서 가격 변동과 투자자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거래소의 전

산 오류 하나가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장부 거래와 실제 블록체인 자산 간의 실시간 검증 체계와 함께 다중 확인 절차, 인적·시스템 오류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유사 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 및 보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거래소 내부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리고, 투자자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구조적

결함”이라며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 이동 없이 거래소 내부 장부상의 숫자만 오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거래소는 있지도 않은 코인을 팔아치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뱅크런’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이라더니, 관리는 아날로그 구멍가게인가. 금융 당국과 빗썸에 묻는다.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는 때도 주문이 나갈 때, 시스템은 왜 멈추지 않았나. 30억원이 인출될 때까지 경보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라며 “지금의 코인거래소 제도와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규명하고,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입력 사고’와 빈번히 발생하는 ‘해킹 피해’는 내부통제 부실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그동안 뒷집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부실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美 ‘親 디지털자산’ 정책 후퇴… 비트코인, 7만달러 하회

비트코인, 3일 연속 6만달러 대 거래
이더리움, 바이낸스도 50%대 하락
美 정부, 디지털자산 추가매입 선 그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친 디지털자산’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디지털자산이 급락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자산의 전략적 비축을 사실상 중단한다고 언급하면서다.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7만달러 아래로 내렸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자심리도 얼어붙었다.

8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시께 BTC당

6만9188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약 1.08% 하락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은 3일 연속으로 6만달러 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7만달러 아래에 거래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던 지난 2024년 11월이 마지막으로, 작년 10월의 고점 대비 하락 폭은 45%에 달한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자산)의 가격 하락도 거세다.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2100달러 수준에 거래되면서 작년 10월 고점 대비 57.8%의 하락을 기록했고, 3위 바이낸스(BNB)의 낙폭도 52.8%에 육박했다. 작년 10월 4조3000억달러에 달했던 디지털자산 시장의 전체 시총은 2조3700억달러까지 줄어, 약 45%나 감소했다.

최근 디지털자산 가격이 급락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져서다. 앞서 트럼프가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 대통령’을 자처했던 만큼 그의 취임을 전후해 디지털자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가격도 함께 급락한 것.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자산 가격 방어를 위해 규제금융을 실시할 수 있는 질문을 받았다. 베센트 장관은 “재무장관으로도, 금융안전감사위원회(FSOC) 의장으로도 그럴 권한이 없다”라면서 “정부는 법적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만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기보유한 비트코

인은) 정부가 돈을 내서 산 것이 아니다.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권한도 우리에게 없다”라면서 “더군다나 정부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5년 3월 디지털자산을 정부의 주요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베센트 장관이 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추가 매입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심도 얼어붙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심을 나타내는 ‘공포-탐욕지수’는 8까지 하락(100에 가까울수록 시장 강세)해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집계 이후 최저치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가격이 중·장기 하락으로 진입하는 ‘크립토 윈터(디지털자산 겨울)’에 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은 약 1~2년의 가파른 가격 상승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을 수 차례 반복했다. 이같은 패턴은 주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와 맞물려 반복됐다. 최근 반감기는 지난 2024년 4월이다.

다만 최근의 시장 상황을 ‘크립토 윈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디지털자산 시장조사기관 타이거리서치는 “과거의 크립토 윈터는 시장 내부에서 그 원인이 발생했는데, 최근 흐름은 시장 외부에서 왔다”라며 “(수개월간) ETF 승인과 관세 정책 등 외부 요인이 시장 변동을 주도했다. 디지털자산 업계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외부 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크립토 윈터’의 재연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빅터 차 “‘안보 美, 경제 中’ 공식 한계… 중견국과 결합 필요”

〈美 CSIS 소장·조지타운대 석좌교수〉

中 경제적 강압, 체계적·반복적
무역 무기화 시도 사전 차단해야

관세와 통상 정책이 순수한 경제 수단을 넘어 외교·안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되면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흐드는 ‘경제적 강압’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한국의 기존 선택 역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개별 대응을 넘어 중견국과의 연대와 집단 대응 전략이 현실적 선택지로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담당 소장이자 조지타운대 석좌교수(사진)는 지난 6일 서



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소개하며 중국의 경제력 강압이 이미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전략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보호무역이나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는 시장 접근이나 공정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통해 18개국, 470개 기업을 압박해 왔다. 미국 기업이 2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9곳), 한국과 대만(각각 33곳)도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중국식 경제 압박의 특징으로 비공식·비공개 방식,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수단 활용을 꼽았다.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중단, 일본에 대한 희토류 압박,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중단 조치가 모두 같은 맥락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차 교수는 대응 전략으로 중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역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UNCTAD) 2024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589개 품목에서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9개 품

목은 90%를 상회한다. 차 교수는 “개별 국가로서는 취약할 수 있지만, 연합하면 중국에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가질 수 있다”며 “상호의존성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중국의 무역 무기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국이 추진하는 디리스크잉(derrisking), 즉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도 차 교수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한 공급망을 지키면 중국은 다른 공급망을 공격한다”며 “문제는 대응이 아니라 역지(deterrence)”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나토(NATO)의 집단방위 논리를 경제 영역에 적용해, 특정 국가가 경제적 강압을 받을 경우 동맹·파트너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사전에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이어진 대답에서 차 교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에 대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기업의 투자 흐름과 공급망 재편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선택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희토류 등 일부 핵심 품목에서는 여전히 중국의존이 남아있으며, 이것이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집단적 회복력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G7을 중심으로 호주 등 중견국과 결합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차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EU 차원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공유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직접 경험하며 대응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들과 한국이 결합한 ‘G7+한국·호주’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